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인주하

2024/ 4/ 24 통권 167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두 가지 환경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회사의 제품을 임직원에게 저가 판매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사업지원서비스 용역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상호면제조건의 영세율 적용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최종 소비자대행이나부가세 면제 업무대행용역의 부가세 면제〉

개념, 구분	부가세 면제 범위, 이유,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위탁급식업자	공장 등의 구내식당, 초·중·고·대학의 구내식당 음식, 학교 급식음식용역(제2호)
농·어업 경영 대행	농·어업 경영, 농·어업작업의 대행용역(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제3호)
국민주택 유통	국민주택의 건설 → 리모델링 → 공급, 판매, 분양 후 거래 전반(제4호)
국민주택 관리·경비 등	국민주택 공동관리주체 등의 관리 경비 용역, 청소용역비 등(제4의3)
일반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수도권 제외, 수도권이면 135㎡ 이하: 4의2)
노인복지주택	관리주체 등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 4의4)
영구임대주택 난방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4의5)
정부업무대행	우체국, 농어촌공사 등, 수협, 어촌계 등, 토지주택공사, 지방공단 등(6호)
대중교통버스	천연가스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친환경버스(전기, 수소차 등: 9호, 9의2호)
기저귀, 분유	영·유아용 기저귀, 일반분유, 액상분유 등(11호)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2호 / 주간 17호

2024. 4. 24.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최종 소비자 대행이나 부가세 면제 업무대행영역의 부가세 면제	표지
C E O 에 세 이	두 가지 환경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숙박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교육세 및 부가세 관련 문의 - 법인가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회사의 제품을 임직원에게 저가 판매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대주주 판정 시 보유주식 합산기준 -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8 9
직장인 Survival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라	10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 득에 해당함 (서면법규소득-2671, 2023.01.25)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 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11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중동시대 약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13
마 케 팅 Tax consulting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사업지원서비스 용역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 받는 경우 상호면세조건의 영세율 적용됨	11
세 무 정 보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1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두 가지 환경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미래경영은 친환경·친인간 경영이다. 고유가와 환경오염을 반영한 친환경 기술의 미래형 하이브리드카와 수소연료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 반응해서 전기를 얻는 미래 동력원이다. 또 운전석 자체가 휠체어로 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이른바 친인간 자동차도 있다. 평소에는 휠체어로 사용하다 자동차 운전 시에는 자동으로 운전석에 장착되는 편리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환경과 인간은 미래경영의 필수 과제가 됐다. 21세기 기업에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환경’이 있다.

첫째, ‘자연환경’이다. 상처 난 환경의 역공을 받지 않으려면 매년·분진·폐수 등의 방출을 억제하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절약해야 한다.

둘째, ‘사회 환경’이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처럼 인간 개개인과 고객 개개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인간중심경영은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사회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른바 사회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 이것이 또 다른 이름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는 규범이다. 이는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짐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선순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은 법적으로 정당함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모범이 되기를 요구 받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다른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 받는다. GE는 에디슨에 의해 창업되었지만 오랜 세월 전문경영체제를 굳히면서 미국 경영자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디지털 문명의 총아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자식에게 대한 재산상속 대신 부의 사회 환원을 선언하고 상당부분 실천함으로써 또 다른 미국식 자본주의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유럽의 최대 재벌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탁월한 경영을 해왔

다. 통신회사 에릭슨, 자동차 및 항공기 엔진업체 사브, 세계3대 엔지니어링기업 ABB,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SEB은행 등 14개 상장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유럽의 대표기업이다. 발렌베리는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와 결합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 사회에 공헌해 왔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 사람들은 보통사람처럼 운전을 손수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고 한다. 사는 집도 가진 부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 잔디를 깎는 모습이나 인근의 평범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국의 대표기업 경영자들이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12일 (금)	4월 15일 (월)	4월 16일 (화)	4월 17일 (수)	4월 18일 (목)
미	달	러	(USD)	1363.70	1371.60	1383.70	1395.30	1386.30
일	본	엔	(JPY)	890.06	894.80	897.43	901.91	898.36
영	국	파운	(GBP)	1712.19	1708.26	1722.50	1734.08	1726.84
캐	나	다달	(CAD)	996.53	996.51	1003.77	1009.40	1006.68
홍	콩	달	(HKD)	173.99	175.00	176.73	178.17	177.04
중	국	원	(CNH)	188.03	189.14	190.58	191.99	190.83
유	로	화	(EUR)	1462.98	1460.14	1470.60	1481.88	1479.46
호	주	달	(AUD)	891.93	887.49	891.52	893.90	892.57
싱	가	폴	(SGD)	1007.91	1007.83	1015.34	1022.39	1019.00
말	레	이시	(MYR)	287.25	287.55	289.54	291.17	289.32

숙박권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법인A에서 호텔 숙박권을 고객에게 기부 이벤트 목적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숙박권 대금을 지급후 호텔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습니다. 숙박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라면 관련 법 조항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A 상품권(숙박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현금대용증권이므로 숙박권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귀사는 실제 숙박권이 사용되어 숙박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는 숙박권을 구매시 법정증빙을 받고자 한다면 법인카드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교육세 및 부가세 관련 문의

Q 회사는 현재 표준산업분류 66199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671201(금융 및 보험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속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상태인데, 만약 과세당국에서 면세 사업자 처리 후 '교육세' 납부로 바뀌게 된다면 세액납부의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다른 세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가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만 부가가치세는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귀사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특별한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Q 당사A의 일부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 B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분할하기는 하였으나, 판매처 중 온라인 법인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 분할후에도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역)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고, B법인에 대금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B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B법인으로부터 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입은 판매수수료로, 매출대금 차감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음)

1.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2.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1) 매출 : A는 기타매출 마이너스 신고하여, 결국 매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B는 기타매출 신고하여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2) 매입 : A법은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 B법인은 증빙없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A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수수하면 안되고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수수를 B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Q

회사 노동조합에(노동조합계좌번호)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형식으로 금액을 지급시 업무추진비(접대비)인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요? 그리고 별도 증빙은 없는데 상관없을지요?

A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조가 별도 영리조직 아니고 회사 내 조직의 일부이니 적격증빙 불필요(1년 사용내역서 등 첨부)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Q

1. 외상채권 중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별도 증빙없이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019년 이전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가능한지요?

2. 해외외상채권도 대손 가능한가요?

A

1. 외상채권도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처리하게 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회수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외 채권도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품을 임직원에게 저가 판매시의 회계 및 세무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직원할인’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임직원에 대한 저가 판매는 임직원에 대한 혜택적 제도로서 엄밀하게는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회계 및 세무처리의무가 수반된다.

하지만 거래의 특성상 회계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세무상으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 거래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임직원에 대한 저가 판매도 회계상 매출로 반영함

임직원에게 소비자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격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유상판매, 즉 매출에 해당되므로 회계처리는 매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매출가액을 원래 판매가격인 소비자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원래 판매가격인 소비자가격으로 반영했을 경우 소비자가격과 할인가격과의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만 결정하면 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이나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에누리란 판매시점부터 물품의 가액을 감액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의 경우도 매출에누리 보아 매출에누리만큼을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즉,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소비자가(시가)가 아닌 실제로 판매한 가액인 할인된 가액을 매출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시가 100,000원의 물건을 20% 할인하여 임직원에게 판매한 경우

차) 현금	80,000	대) 매출	80,000
-------	--------	-------	--------

임직원에게 대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 판매시는 부당행위 적용됨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도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에게 대한 할인판매의 세무상 처리방법도 특별한 사항은 없다.

다만,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탈루문제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임직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만 고려하면 된다.

법인세법 통칙 52-88...3은 사용인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제품의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 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며, 판매 수량이 임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인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되는 가격이 해당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가액보다는 높도록 하고 할인율도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임직원 개개인이 구매한 상품을 다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매 수량을 제한하면 부당행위 문제도 해결된다.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대주주 판정 시 보유주식 합산기준

구분	대주주(최대주주 X)	대주주(최대주주 O)
상장주식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비상장주식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금융사 추천 절세 상품

금융사	상품	설명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고위험 포트폴리오1'	증시 하락 땀 환차익으로 손실 만회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하나은행	유연대용신탁	상속 절차 투명성 높여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에 비과세
NH농협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금 투자 비중 자동 조정
IBK기업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수익 과세이연 효과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뉴일시납연금보험	노후 준비에 비과세 혜택도
한화생명	한화e연금저축보험	저축하면 최대 99만원 세금 환급
교보생명	교보변액연금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주택취득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취득: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				
납부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됨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당시의 가액• (유상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 증여)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예외: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과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6.5억원	1.33%	0.1~0.3%	
		7억원	1.67%		
		7.5억원	2.0%		
		8억원	2.33%		
		8.5억원	2.67%		
	9억원	3.0%			
	9억원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세: 중과분(8% 및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5.12.31.까지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라

꼼꼼한 계획이 없으면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도중에 좌절하게 되는 것은 대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일이다.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쉽다.

가령 1년 동안 성적을 3등급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해도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나태해지기 일쑤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피울 시간도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시작이 중요하며, 계획은 시작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신 판 례 예 규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소득-2671, 2023.01.25

Ⅰ 질 의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Ⅰ 회 신

질의 :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신 :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부가-3381, 2023.03.14

Ⅰ 질 의

-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사업지원서비스 영역 제공하고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상호면세조건의 영세율 적용됨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영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영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468, 2023.08.18

Ⅰ 질 의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영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 ① 해당 영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②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회 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하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서비스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쟁점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가 전액을 쟁점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 질 의

- "AAA"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AA는 출산휴가(3개월) 및 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한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총 15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 출산휴가기간 3개월 중 기존 근로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함
- 한편,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존 근로자는 '22.12.31.까지 복직하였고, 대체인력은 '22.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질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휴가직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육아휴직 복귀자의 복직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동사태 악화'로 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추진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가 커 상한제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된다.

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 국세청, 2024. 4

I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회사계상 수입이자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율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불성실 신고 사례

최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장거래를 이용하여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허위·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되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불성실 신고 사례>

불성실 신고 사례	과세 내용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바로 그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2.02.10. 등)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대표자가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취득한 특허권의 실질 소유는 법인으로 보고 특허권 양도대금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2.10.27. 등)

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사람

<유지·관리비 및 적정임대로 여부>

구 분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적정임대로 계상 여부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적정임대로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적정임대로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5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6 분식결산과 세무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7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8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채신 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가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추가되는 세목 한정)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분	내용		수도권		수도권 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	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창업중소 기업감면 (조특법\$6)	5년간 50~100% 세액감면		5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만)	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알뜰주유 소 제외)	소기업	의료, 도·소매업 10%		
			알뜰주유소 20%		
			기타감면업종 20%		기타감면업종 30%
			통관대리 10%		통관대리 15%
	중기업	알뜰주유소 10%		의료, 도·소매업 5%	
				통관대리 등 관련 서비스 7.5%	
				기타 감면업종 15%	
		알뜰주유소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		공제 허용	



- ※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2.1.1.~'23.12.31.까지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3.1.1. 신고분부터 감면하되,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 ※ 수도권 내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 종료(조특법 §7)
-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보령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4.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조특법 §130 2항)

구 분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1990.1.1. 이후 사업개시
일반기업	x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x (정보통신장비 등 ○)
중소기업		x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 §7)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 §29의8) -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 §29의8)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

	<p>법 §7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 §30의3)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5%)(조특법 §19)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 §13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인세법 §25) - 대손금 특례(법인세법령 §19)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 §29의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72)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세법 §128)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인세법 §64)

5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 요 내 용
신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 §3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75%, 그 외 50%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임금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6 시설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table><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 반</td><td>1(3)</td><td>5(7)</td><td>10(12)</td><td rowspan="2">3(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6)</td><td>6(10)</td><td>12(18)</td></tr><tr><td>국가전략기술사업화*</td><td>15</td><td>15</td><td>25</td><td>4(10)</td></tr></table>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4(10)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4(10)																		
	() : '23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 국가전략 : 7개분야 66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의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시설 공제세액 -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의4) *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7 R&D 세제지원

신성장, 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조특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기타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8 M&A 세제지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p>*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p>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9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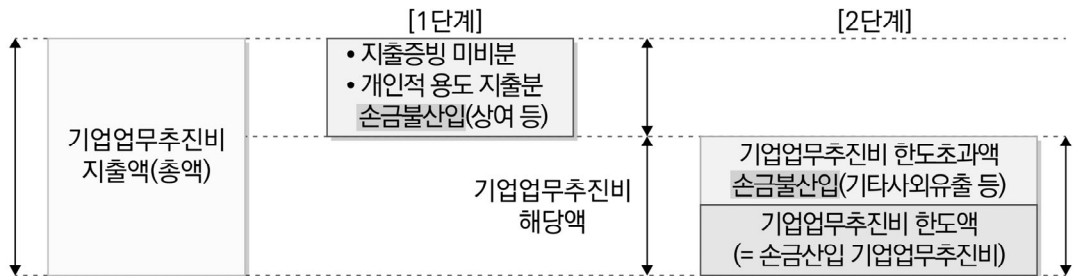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2년 인하분 → '23.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9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제도개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전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귀속시기와 평가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

* 원가 500, 판매가 600원의 상품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는 600원 + 60원 = 660원으로 평가

10 대손금의 세무처리

제도개요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⑤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손사유

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손사유별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의 귀속시기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결산조정사항)과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

-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1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

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00의32)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댄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text{기업소득} \times 70\% - (\text{투자금액} + \text{임금증가금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투자제외방식: $[\text{기업소득} \times 15\% - (\text{임금증가금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3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1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²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 - 0%(5%, 10%)))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3.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7.31.)
 - *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1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4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 / 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6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 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은 제외

17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 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 + 20억 초과금액 × 15%
50억초과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 20억원 한도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등의 불이익



18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보고서 종류·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연도에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②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주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

II **세정지원**

1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의 세정지원 대상이었던 스타트업, 혁신기업,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기업 외에 수출 증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수출기업, 신산업 분야 및 구조조정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	• 혁신성장기업 (스타트업, 혁신, 청년친화강소, 일 자리창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2024년 추가	• 소재·부품·장비 기업 : 원재료, 중간재, 생산설비 등 생산 • 뿌 리산업 분야 기업 : 공정기술, 로봇·센서 등 기술 보유
----	---	---	-------------	---

세정지원 내용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우선 처리,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지원과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등 경영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가된 뿌리기술 전문기업과 소부장 전문기업에는 수출기업, 신산업분야, 신기술·녹색기술 인증기업과 더불어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홈택스 전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지방국세청에 상담전담반을 설치하여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정지원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잘못된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세법정보를 찾거나 상담을 원하시나요?]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⑰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찾기 연구>조회하기 사전심사신청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 ·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① 연구개발비 명세서 ② 연구개발 보고서 3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제도 개요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샘플로 작성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8.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개시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방법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컨설팅' 조회
컨설팅 검토 결과는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공제·감면 컨설팅의 혜택은

-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경우
-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IV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 세율 및 과세표준		○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 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을 차등 적용	



<일반법인>

상장법인 지분율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30%이상 100%미만	50%이상 100%미만	50%
30%미만	50%미만	30%

<지주회사>

상장법인 지분율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이상 100%	80%이상 100%	100%
30%이상 40%미만	50%이상 80%미만	90%
30%미만	50%미만	8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30%

→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이중과제 조정 합리화

■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p>■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p> <p>○ 「상법」§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p> <p>-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p> <p>○ (좌 동)</p> <p>-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제외</p> <p>-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p>

→ ' 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

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조정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의 감소 등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종전	개정
<p>■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신 설></p>	<p>■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재평가법」을 위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금액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 ○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은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p>*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 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p>

→ '24.1.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5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p>■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023.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법인투자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p>■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 원천징수세율 - 조정외국납부세액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으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 조정부율(원천징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조정부율(원천징수) : 시행령 규정</p> <p>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원천징수세율</p> <p>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 </p> </div>



<p>■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023.1.1. 시행)</p> <p>○ 개인투자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p>○ 법인투자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p>*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p>○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조정 외국납부세액²⁾</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 조정비율(확정신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조정비율(확정신고) : 시행령 규정</p> <p>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p> <p>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종합소득세율 등}$ </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p>*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p>
--	---

→ '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종전	개정
<p>■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p> <p>○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할 경우 포함 ②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 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p>■ 적용대상 확대</p> <p>○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p> <p>* ①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p> <p>② (좌 동)</p>

■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좌 동)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 지배(연결지배)하는 경우 90% 아성 지배(연결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

→ ' 2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종전	개정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2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 과세형평제고 및 양식업 지원

종전	개정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 (어로어업소득) $3,0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div 12)$ ○ (어로어업 외 소득)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div 12)$	■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3,0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div 12)$ ○ (어로어업·양식어업 외 소득)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div 12)$



9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

종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소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배당소득 분리과세)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배당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감면 등 소득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10 근로소득 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 1년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종전	개정
■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산식) (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 ÷ (해당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 × 12 ○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평균임금 	■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근로소득금액

→ '24.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 합리화

종전	개정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정규직 근로자* : 1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특수관계인 등 제외 -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0.5명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 0.75명 *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 (좌 동)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좌 동) ○ (좌 동)

1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전	개정
■ <신 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요건(①, ② 모두 충족) ①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 ②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 ①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②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 ③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④ 주요 IP* 중 3개 이상 보유 * 「저작권법」에 따른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권

→ ' 24.1.1.이후 발생하는 제작비부터 적용



13 영상콘텐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전	개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 - 대 / 중견 / 중소 : 3 / 7 / 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기본공제율) 대 / 중견 / 중소 : 5 / 10 / 15% (추가공제율)* 대 / 중견 / 중소 : 10 / 10 /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14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 벤처투자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종전	개정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법인 * 벤처기업등 출자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13)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제외 ① 벤처투자회사 (이하 생략)	■ 제외대상 추가 ①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좌 동)

→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